



인천시 상수도본부

행정직 ‘팬’...‘기술직’ 홍보 장악

붉은 수돗물 사건 터지자 수질관리부서가 홍보팀 운영 시 대변인실 상수도 언론자료 배포...거액예산 집행 상수도

인천시상수도본부의 홍보 보도자료는 알맹이와 전문성이 부족한 팀에서 틀에 박힌 내용을 인천시로 전송하여 대변인실에서 언론사 시 출입하는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별도의 거액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다. 전문성이 없는 기술직 부서가 언론사와 기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함으로 행정직이 허수아비가 됐다는 지적이다.

수백 명이 되는 기자들과 언론사를 인천시 대변인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상수도본부가 이중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 등 반발 주장은 설득력이 크다.

기술직들은 현장으로 나가 수질관리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상수도 실태를 더 정밀하게 파악해 과거 붉은 수돗물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가 요구된다.

수질관리 행정에 몰두해야 할 부서가 너무 할 일이 없는 것인지 행정이 해오던 업무를 누가 주어 영터리로 개편했느냐는 것, 언론사를 상대하는 행정이 반대로 갔다는 지적은 따갑다.

이를 두고 A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이 할 업무를 수질을 담당하는 기술부서가 홍보를 넘겨 받아 책상다리 행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시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면서 구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수도는 공사·공단·청이 아닌 본부로 종합건설본부와 같은 산하기관이다. 종합건설본부는 별도 홍보예산이 없어도 인천시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홍보 공백이 없다고 한다.

상수도본부 거액예산 사용과 결이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험세 낭비란 소리는 당연해 보인다. 시민들은 잉여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라고 성토의 목소리가 거세다. 시 행정 개편이 요구된다. 특히 시민 목소리가 굵지 않은 상태임에도 인천시가 엇박자 행정을 두고 보는 것은 문제라고 한다. 외부 공모를 통한 사장 체제가 아닌 시 공무원이 파견된 본부이기 때문에 분석된다.

인천시 관리체제 아래서 상수도는 국장급 본부로 시 국에서도 상수도처럼 별도 거액의 홍보비는 사용하지 않는다. 상수도는 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기술직은 현장으로 가야 한다. 특히 행정직 내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민 험세를 아끼는 행정으로 풀이된다. 인력이 남아 돌아간 것으로 해석되기에 조속한 업무 이관이 요구되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기자실도 없다. 홍보팀 업무 중 인천시의 협조를 받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질뿐더러 인천시가 홍보와 관련해 이관 처리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현재도 시 대변인실에서 협력해 주고 있다. 이런 문제가 산하기관 이중성에 홍보예산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짜임새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내부적으로 시행하란다.

시 행정 폐단은 곧바로 시정을 함으로 과거 구습과 타성을 버리고 답습하지 않은 태도가 옳은 행정이라고 한다. 넘치는 공무원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목소리다.

개선이 시급한 것은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꿈에 직장이 됐기 때문이다. 보고체계가 너무 많아 고위직 등 할 일이 없다는 것이 공무원 사회 민낯이다. 또한, 행정을 제치고 기술이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논란을 불러오는 문제로 시정은 불가피하다. 시는 상수도본부 홍보예산 전액을 이관받아 시너지를 만들어야 내야 할 것이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상수도본부 예산집행과 관련해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맞는 반응을 보였다. /김양훈 위원, 최재윤 기자

송도국제도시 ‘G1-1·A5블록 개발’ 사실관계 반박

연일 터지는 어중간한 보도...시민 어지럽다 강조 명확한 취재로 반박이 없는 언론환경 필요성 제기

인천경제청이 어중간한 보도로 인해 연일 반박과 해명을 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청 반박 등 사실과 다른 해명이 나오자 언론환경에 대해 시민들은 너무 어지럽다고 명확하게 반박하지 못할 기사를 다루라고 굵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시민들은 기사는 팩트 체크가 중요한 것으로 상대가 반박이나 해명을 내는 것은 그만큼 언론 기자의 조사가 면밀하지 못했다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터진 내용은 ‘짜고 친 송도개발...인천경제청, 공정성 논란’ 8월 22일 자이다.

인천경제청 반박할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미국 출장 중 개발사업자와 물밀 작업을 마쳤다는 주장 및 미디어 파사드 등 개발 방향을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고 나섰는데 G1-1은 아트센터 개발과 관련하여 (주)OK센터가 그동안 개발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현재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던 부지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경제청이 해당 부지의 개발을 위해 다각도 검토 중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을 도입하겠다는 제안사가 있었으나, 보다도 객관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에 박물관뿐만 아니라 문화 집객시설(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로 영역을 확장하여 모든 사업희망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모를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자연사 박물관이 가지는 영향력과 각종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경제청 공식업무의 일환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지만, 공정성 차원에서 공모를 통해 송도 국제도시에 걸맞은 더 나은 목적시설의 제안사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미디어 파사드 등 개발 방향에 대해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다음 A5에 재외동포를 위한 거주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는 내용도 반박했다. A5부지 역시 사업자 공모를 준비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공모 조건이나 개발 방향 등이 수립되기 전 단계다.

참고로 해당 부지는 지난 2017년 이미 공개경쟁입찰(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바 있으나,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져 있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으로 인해 고밀도 개발이 불가능으로 당시 토지가로 제시했던 감정가가 실제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이 크지 않아 4차례나 유찰된 뒤 공개 매각을 포기한 부지라고 했다.

투자유치업무의 특성상 이처럼 개발이 미진한 토지는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된 조건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게 된다는 것, 이 과정에서 공모가 수립되기 전 사업자 측에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공정한 절차 (부서간 협의, 내·외부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검토, 사전 통합회의, 정책현안조정회의, 내부결재)를 절차대로 수행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 공식 입장은 최초 제안자가 있어 공모가 불공정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민간제안사업에서 최초 민간제안이 있을 경우는 검토 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거나,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공모를 통해 더 좋은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밝혔다.

만약 창의적인 사업계획, 우수한 시설 및 기업의 유치를 제안하는 사업자들을 특혜라고 단정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민간제안을 하는 사업자는 사라질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도 창의적·적극적 업무 추진을 못할 것이다. 최근 인천경제청이 어렵게 추진해온 여러 유치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린다. 이러한 상황을 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경제청의 연일 반박 등 사실과 다른 정보도 요청이 공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해명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으로 와전이 되는 언론의 파괴력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재윤 기자

인천시, 행안부 주소정책 홍보 공모전 ‘최우수’ 선정

시 캐릭터 활용한 웹툰 형식 제작...지하철 등 홍보, 전국 지자체와 공유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 카드뉴스 분야에서 ‘등산 중 국가지점번호 활용법’이 최우수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주소정책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사례를 한자리에 모아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6개 분야 총 128건이 공모 참가한 언론사, 광고대행사 등 관련 전문기관의 1차 심사와 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인 ‘온국민소통’에서 2주간 대국민 2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 카드뉴스 분야에서 인천시 홍보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한편 ‘국가지점번호’란 경찰, 소방, 산림청 등 기관·지역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 체계를 통일해 산악·해안지역 등에서의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활용



하고 있는 주소정보의 하나다. 인천시에는 현재 1246개의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인천시 캐릭터인 버미, 꼬미 등이 등산 중 다쳤을 때 스마트폰으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구조를 요청하는 웹툰 형식으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했다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인천지하철 및 수인분당선의 열차

내 모니터 등에 홍보하는 한편 주소정보 누리집에도 공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주소정책 홍보자료로 공유할 계획이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공모 선정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시민이 생활 속에서 주소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윤 기자